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775
----------	-------

발의연월일 : 2025. 6. 12.

발 의 자 : 서미화 · 최민희 · 권향엽
윤종균 · 김원이 · 이수진
서영석 · 안태준 · 오세희
박정현 · 이용선 · 김 윤
양문석 · 김영환 · 강준현
김예지 · 전종덕 · 박지원
허성무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장애실태조사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위탁 수행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제도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조차 공개되지 않아 장애인 인권정책 수립의 신뢰성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신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실태조사)”를“(실태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장애실태조사”를 “장애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로, “내용”을 “내용, 공표방법”으로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u>실태조사</u>) ① (생 략)	제31조(<u>실태조사 등</u>)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8조제 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 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필 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 하여 매년 장애인거주시설 인 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u>장애실태조사</u> 의 방법, 대상 및 <u>내용</u>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 <u>장애실태조사</u>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거주시 설 <u>인권실태조사</u> ----- <u>내용</u> , <u>공표방법</u> -----.